



■ 교육부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예측 및 보완대책 발표 기자회견(2020. 1. 9.)

정부는 대입에서 수능의 실질 영향력이 87%까지 상승해 생기는 대혼란을 막기 위해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등 4대 보완대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늘 작년 11월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예측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 작년 11월 28일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율 4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함.
- ▲ 이번 방안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 사교육 시장 팽창' 및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호를 주고 있음.
- ▲ 방안이 적용되는 2022~2024학년도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예측이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고교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임.
-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 방안에 따라 실제 대학의 입학전형 비율과 전형요소 등이 어떻게 바뀔 것이며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입 변화예측을 실시함.
- ▲ 특히 '수능전형 40%이상 확대, 논술전형 폐지, 지역균형선발 10%'를 각 대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으로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와 같은 전형요소가 대입에서 미반영될 때 수능 등급 등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관건임.
- ▲ 대입변화 예측 결과는 아래와 같음.

【최악의 시나리오】 정시 40% 확대, 논술 전형 유지 및 논술과 학종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함.

-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전형 비율이 87%까지 상승.
- 현행(2022학년도 기준 약 62%)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21% 상승하는 상황임.
- 사교육비 폭증,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 급등,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대학이 교육부 방안(정시 40%, 논술 폐지, 사회통합전형 확대)을 수용,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40~45% 정도가 될 것임. 현행 62%보다 약 20% 가량 축소됨.
- 고교교육 혁신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환경은 마련됨.
- 사교육비 폭증 및 강남 부동산 폭등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음.

▲ 위와 같이 이번 방안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없을 경우 수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다분하며 앞서 제기된 사회적 신호는 증폭될 수 밖에 없음.

▲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아래와 같은 보완대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촉구함.

【보완대책 ①】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주어 정책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을 진행해야 함.

【보완대책 ②】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관철시켜야 함.

【보완대책 ③】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논술 폐지 및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함. 정시 수능 전형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도 사교육비 폭증 및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 급등을 막고,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 대책임.

【보완대책 ④】 고교 교과 활동 및 기록 방식의 개선을 통한 대입전형 자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교육부는 작년 11월 28일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수능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하 학종)에서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을 차단해 공정성을 강화하며,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교육계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벌써 각종 홍보를 통해 '정시 강화 대비 전략'과 '정시 확대 재수가 답이다'라는 등의 자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강남·목동 등 사교육과열지구 부동산이 급등한다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교사들이 고교교육이 '수능으로 퇴행'될 것이라는 비판을 하는가 하면 '수능과 내신 투 트랙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강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학점제 등 미래형 고교혁신은 지식암

기 중심의 입시교육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혁신은 물건너갔다는 반응도 상당합니다. 일각에서는 비교과 활동의 반영을 축소할 학종 개선 방안은 입시에 반영되는 항목이 줄어 '무늬만 학종'이라는 비판을 합니다. 결국 학종에서 볼 것이 대폭 줄어들면 대학은 그간 적용하지 않았던 수능 등급이나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 방식으로 면접을 치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은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주는 사회적 신호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방안이 적용되는 2022~2024학년도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기관과 언론을 비롯해 여러 예측이 등장하면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 현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자체 분석은 물론이고 대입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 교사가 참여한 내·외부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이번 방안에 따른 대입변화를 예측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방안의 세부 내용에 따라 실제 대학의 입학전형 비율과 전형요소가 어떻게 바뀔 것이며, 이것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논의의 결과인 교육부 방안에 따른 대입 변화 예측결과와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 대입 변화예측의 관건은 '수능전형 40%이상 확대, 논술전형 폐지, 지역균형선발 10%'를 대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으로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와 같은 요소가 대입에서 미반영될 때 수능 등급 등의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임.

대입 변화예측의 관건은 '수능전형 40%이상 확대, 논술전형 폐지, 지역균형선발 10%'를 대학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시행으로 '수상경력 및 자율동아리'와 같은 요소가 대입에서 미반영될 때 수능 등급 등의 추가적인 전형요소를 학종에서 어떻게 반영하느냐입니다. 각 대학이 교육부 방안에 따라 설계할 입학전형별 비율과 전형요소가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결정짓게 될 것인데 이 비율이 현재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정책 과제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의 사항을 대학이 어느 정도로 수용하느냐에 따라 앞서 언급한 혼란스러운 사회적 신호가 지연되거나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더욱 폭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1]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포함된 과제와 추진 로드맵

과제	전형도	'21학년도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
1	학생부 비교과영역 축소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 (소논문 기재 금지, 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 자율동아리 기재 제한 등)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20.3월 ~)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 보급 ('20.3월 ~)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자기소개서 개선 (문항 및 글자 수 축소)		자기소개서 폐지
2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면접→서류+면접) 고교프로파일 전면 폐지			
		·평가기준 공개 양식 개발 및 대입정보공개 강화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규정 신설 ·전형유형별 고교유형 및 지역별 선발결과,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별 수혜율 등 정보공시 확대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입학사정관 수 등 정보공시, 입학사정관 공통교육과정 개발 ·입학사정관 교육시간 강화 : 신입, 경력 모두 40시간			
3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22학년도 조기달성유도)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사회통합전형 도입·의무화	·사회통합전형 법적 근거 마련 ·재정지원과 연계 하여 확대	·재정지원과 연계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 및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권고)		
	특기자전형 및 논술위주전형 폐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폐지 유도			

- 자료출처: 교육부

세부적인 대입 변화 예측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악의 시나리오】 정시 40% 확대, 논술 전형 유지 및 논술과 학종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함.

- 수시와 정시를 포함해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전형 비율이 87%까지 상승.
- 현행(2022학년도 기준 약 62%)보다 수능의 영향력이 21% 상승하는 상황임.
- 사교육비 폭증,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 급등,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임

사교육걱정이 예측한 대입 변화예측 결과 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학이 정시 40%확대를 수용하고 논술전형은 소폭 축소해 유지하면서 논술과 학종 등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정시 수능전형을 40%로 확대하는 것이므로 각 대학이 이것은 수용하지만 대학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그간 입학전형료 수입이 높은 전형으로 간주되었던 논술전형을 소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학은 논술전형을 소폭 축소하는 만큼 수능 전형 40%와 지역균형선발 10%를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율을 학종을 축소에 맞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논술전형의 비율은 현행 12.1%에서 약 10%로 소폭 감소됩니다. 반면 학종은 42.6%에서 30%로 약 12.6%p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능전형과 논술전형의 합이 50%가 되고 여기에 수시 이월인원을 약 5% 정도로 간주하고 학종과 교과에서 최저를 걸고 있는 대학을 계산하면 수능의 영향력은 55~60% 가량이 될 것입니다.

[표1] 논술을 소폭 축소하고 학종을 축소해 수능 40%와 지역균형 10% 비율을 맞춘 표

대학	수능		논술		학종		교과(지균 포함)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건국대	39.4	40	14.7	12.1	30.2	28.0	14.7	20.0
경희대	27.6	40	14.2	12.0	46.9	26.6	0	10.0
고려대	19.7	40.0	0	0	45.4	35.0	30.5	25.0
광운대	36.7	40.0	12.2	10.0	38.2	36.0	9.0	10.0
동국대	30.1	40.0	16.7	12.4	45.7	20.0	0	20.0
서강대	30.1	40.0	14.8	10.0	54.1	39.0	0	10.0
서울대	23.3	40.0	0	0	76.7	40.0	0	20.0
서울시립대	36.8	40.0	5.8	5.8	42.4	39.2	12.8	12.8
서울여대	24.9	40.0	9.4	8.0	34.9	31.1	14.3	14.3
성균관대	33.4	40.0	15.8	13.0	47.7	33.9	0	10.0
숙명여대	24.1	40.0	14.2	12.0	34.9	21.1	11.5	11.5
송실대	34.5	40.0	10.9	10.0	33.3	18.2	17.9	15.0
연세대	35.6	40.0	11.2	10.0	48.5	28.9	0	20.0
중앙대	24.7	40.0	18.2	14.6	30.9	18.2	13.2	13.2
한국외대	33.2	40.0	21.9	17.0	33.0	31.1	9.9	10.0
한양대	31.1	40.0	13.2	12.0	38.8	33.9	10.1	10.0
평균	30.33	40.00	12.08	9.93	42.60	30.01	8.99	14.49

그런데 위의 비율은 기존에 학종에서 이들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걸지 않았을 때를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른 평가 요소의 축소를 대학 측에서 학종이 교과전형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인식을 할 경우 현재 교과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하듯이 학종에 수능최저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 및 폐지하도록 유도해왔던 평가기준이 사라진 현 시점에서 대학이 학종에 수능 최저를 걸더라도 저지할 방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교과위주전형에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비율을 학종에도 적용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됩니다. 전체 모집 정원(수시+정시)의 87%가 수능에 영향을 받는 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적용을 어떻게 막느냐가 이번 방안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표2] 학생부종합전형에 현재 교과전형에 적용되는 수능최저가 적용될 경우 인원 변화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실기/특기자	합계
2021	13409(30)	3067(6.9)	2730(6.1)	4254(9.5)	115(0.3)	23575(52.9)
2022	17829(40)	5560(12.5)	11713(26.3)	3388(7.6)	92(0.2)	38860(87.2)
증감	4420(+10)	2771(+5.6)	8983(+20.2)	-866(-1.9)	-23(-0.1)	15285(+34.3)

- 괄호안은 비율

■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 대학이 교육부 방안(정시 40%, 논술 폐지, 사회통합전형 확대)을 수용, 학종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

-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40~45% 정도가 될 것임. 현행 62%보다 약 20% 가량 축소됨.
- 고교교육 혁신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환경은 마련됨.
- 사교육비 폭증 및 강남 부동산 폭등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음.

최선의 상황은 비율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방안을 대학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전형요소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부 전형 비율과 관련해서 교육부 방안대로 수능전형을 40%로 확대하지만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며, 학종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논술전형이 폐지되는 만큼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사회통합전형 중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10% 내지 20%(현재 10% 이상 운영하는 대학)를 교육부의 의도대로 운영된다면 수능의 영향력은 더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지역균형선발을 수능 등급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학교장 추천 방식을 기본으로 한 교과 전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16개 대학의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수시에서 수능 등급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전형인 논술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된다면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40~45%로 줄어들게 됩니다.

[표3] 논술을 폐지하고 수능 40%와 지역균형 10% 비율을 맞춘 표(단위 %)

대학	수능		논술		학종		교과(지균 포함)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건국대	39.4	40.0	14.7	0	30.2	39.1	14.7	20.0
경희대	27.6	40.0	14.2	0	46.9	38.6	0	10
고려대	19.7	40.0	0	0	45.4	35.0	30.5	25.0
광운대	36.7	40.0	12.2	0	38.2	46.0	9.0	10.0
동국대	30.1	40.0	16.7	0	45.7	32.4	0	20.0
서강대	30.1	40.0	14.8	0	54.1	49.0	0	10.0
서울대	23.3	40.0	0	0	76.7	40.0	0	20.0
서울시립대	36.8	40.0	5.8	0	42.4	45.0	12.8	12.8
서울여대	24.9	40.0	9.4	0	34.9	39.1	14.3	14.3
성균관대	33.4	40.0	15.8	0	47.7	46.9	0	10
숙명여대	24.1	40.0	14.2	0	34.9	33.1	11.5	11.5
숭실대	34.5	40.0	10.9	0	34.7	43.0	17.9	15.0
연세대	35.6	40.0	11.2	0	48.5	38.9	0	20.0
중앙대	24.7	40.0	18.2	0	30.9	33.8	13.2	13.2
한국외대	33.2	40.0	21.9	0	33.0	48.1	9.9	10.0
한양대	31.1	40.0	13.2	0	38.8	45.9	10.1	10.0
평균	30.33	40.00	12.08	0	42.69	40.87	8.99	14.49

현행 대입(2022학년도 기준)에서 이들 16개 대학의 수능전형이 29%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33% 정도로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미치는 전형 비율은 62% 가량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40~45%로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대입에서 수능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이런 신호를 사회적으로 확실히 줄 수 있다면 사교육비 폭증과 강남 부동산 폭등의 열기를 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교교육의 혁신과도 부딪치지 않고 오히려 기존보다 좋은 환경에서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대학이 움직여 줄 것인가, 그리고 교육부가 이번 방안과 기자회견담회를 통해 밝힌 입장을 대학에 관철시키기 위해 과연 강력한 액션을 취하느냐입니다. 교육부가 입장은 냈지만 대학을 최선의 상황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연출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학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관성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고려할 때 이처럼 이상적인 상황이 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 좀 더 쉬운 관측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앞서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과 같은 강력한 보완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보완대책 ①】**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주어 정책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을 진행해야 함.

정부 발표 이후 지금 학교와 학부모 및 (사)교육 시장 속에 불안이 폭증하고 공포를 증폭시키는 교육시장의 흐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과 시장은 이번 정부 발표로 수능 정시 확대는 물론이요 수능의 영향력이 최고의 상태로 팽창될 것이라는, 이번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정책 신호를 감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따라 입시 전략 및 사교육 투자 방식에 새로운 선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부가 그 신호가 잘못되었다고 해명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호를 수신하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발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런 신호 자체가 정책 못지않게 현실에 영향을 중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신호가 지금 어떻게 확대되고 있고 국민들과 학교는 어떻게 이 현실을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수신하는 신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 **【보완대책 ②】** 정부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관철시켜야 함.

정부는 87%까지 확대될 수 있는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교육부가 16개 대학에 40%로 권고한 이 비율 이상 수능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정부는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기준으로 16개 대학의 수능 전형 비율이 약 29%이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비율이 약 33% 정도입니다. 즉 수능의 영향력이 강한 수시와 정시의 전형은 현재 약 62%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과 수시에서 수능을 적용하는 전형 비율이 제로가 됩니다. 이번 방안에 의해 수능위주 전형 비율이 40%로 늘어난다고 하다. 현재보다 대입에서 수능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 **【보완대책 ③】** 재정지원 사업 연계를 통한 논술 폐지 및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적용을 강력하게 유도해야 함.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재정지원 사업이 바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 혹은 폐지하도록 유도해왔습니다. 또한 논술전형과 교과 특기자전형을 축소 및 폐지하도록 견인하고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5년 ‘고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를 보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할 경우 감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평가지표의 배점이 10점으로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평가지표로 인해 서울 소재 대학들 대부분이 논술전형을 제외한 수시전형에서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림2]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기준	감점
■ 전형방법 수 4+2 기준 미준수	-2점
■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일정 미준수	-2점
■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 후 중대한 사항의 변경	-2점
■ 대입전형 기본사항 미준수	-2점
■ 수시 수능 최저기준학력기준 강화	-2점
■ 기타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과 명백하게 배치되는 요소 반영	-2점

○ 학교교육 중심 전형운영 (15점)

평가지표 및 고려사항	배점
■ 전형시기별 학생선발 비율 적절성 ※ 연도별 수시 선발비율, 모집시기별 학생선발 비율 등	5
■ 학생부 전형 학생선발 비율 및 전형내용의 적절성 ※ 연도별 학생부 전형 선발비율,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간 비율, 학생부 실질 반영률, 수능최저학력기준의 완화 정도 등	10

그런데 이 평가지표가 2019년 해당 재정지원사업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국대가 논술전형에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했고, 몇몇 대학들은 수능 최저등급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을 꾸준히 늘리도록 유도하는 한 것도 사실입니다. 초창기부터 학생선발 비율을 증가할 때 높은 점수를 주었다는 사실을 평가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을 통해 대학이 입학전형을 설계할 때 논술전형을 폐지하고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컨대 논술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감점을 최대 10점까지 준다든지,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10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평가지표를 고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3]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정보 충분성, 이해 용이성 등 - 대입정보포털(ADIGA) 정보공개, 기출문제 공개 등 대학 독자적 노력 ■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3) ■ 전형방법 수 축소 노력 등(2)
2.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자체 규정·절차, 타당성, 적용례 등 - 유사도 검증 규정·절차(소명 포함), 타당성, 적용례 등 -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및 강화 노력 -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계획 - 그 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등 ■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2) ■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2)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2)
3.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25 /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과정(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의화, 다단계 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공개, 평가 기준 공개 계획, 고교 다양성 확보 노력, 공통양식 준수 여부,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 취소조치 계획 등 -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방법·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노력(3) ■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여부, 선발비율,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등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위반비율 등에 따라 별도 감점 조치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제재 : 1차위반(위반등급에 따라 최대 -7점 감점), 2차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0점 가중감점), 3차위반(차년도 사업 배제)</p>

■ **【보완대책 ④】 고교 교과 활동 및 기록 방식의 개선을 통한 대입전형 자료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네 번째 보완대책으로는 학종 공정성 강화방안이 도입되는 시기와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단계별로 고교의 교과 활동을 혁신하고 이에 맞는 학생부 기록 방식을 개선해 대입전형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 **세특 구조화(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도입 시기와 연동)**

우선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교과 활동을 역량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세특)’을 구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행 학생부는 학생의 교과 역량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교과에서 수상경력이라든지 자율동아리 활동을 대입에서 미반영 할 경우 전형 자료가 부실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아래 [표1]은 고교 학생부의 예시입니다. 예시 안의 학생은 국어 I 교과에서 원점수 84점을 받았습니다. 과목평균은 71.8이었고, 표준편차는 20.3이었습니다. 성취도 절대평가 B등급, 상대평가 석차는 4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아무리 봐도 학생의 국어 교과 역량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운이 좋은 경우(주로 성적이 좋은 경우), 담당 교과교사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몇 마디 더 적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적이고 단편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마저도 쓰는 교사의 기준이 다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교육과정,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마다 추구하는 교과 핵심 역량을 제시하지만, 지금과 같은 학생부 교과 기록은 전혀 이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림4] 고교 학생부 교과학습발달 상황 예시

과목	1학기				2학기			
	단위 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국어 I	4	84/71.8(20.3)	B(370)	4				
수학 II					4	71/55(27.3)	C(370)	3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국어 I :	논제 ‘고교 내신 절대평가 변화’에 대해 찬성의 입장에서 개요표로 작성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우수하게 전개함
수학 II :	수열 단원 ‘등비수열의 도식화’ 수업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잘 표현함.

[표]에서 보여준 현행 학생부 교과 기록을 개선하려 할 때, 고교 원점수/과목평균/성취도/석차 등급은 대입에서 학생부 중심전형의 핵심 반영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문제는 이번 학생부기록 개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과기록 변화의 핵심은 세특 개선에 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 교육부는 ‘교과세특 기재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마련할 때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부 교과 기록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성취기준이 중요합니다. 이는 교과의 핵심역량이기도 합니다. 그 평가영역을 세분화하여 이에 대한 세부 평점을 기록함으로써 학생 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평가영역에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을 제시하여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핵심역량은 이미 2015 교육과정 개정 시 교과별로 정해졌고, 필요에 따라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제안하는 구조화된 형태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5]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개선안

교과	과목	단위 수	핵심역량	성취도	※ 성취도 관련 특기사항(예시)
국어	국어 I	4	개념 이해	C	발표력에 있어 ‘과제 찬반발표’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다수의 학생이 생각을 바꾸는 현상이 나타남. 창의적 사고력은 ‘프로젝트 과제’에서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참신하고 탁월했음. 작문 능력은 ‘논설문 작성’에서 글의 논지 전개 일관성이 떨어짐. 논리적 사고력은 ‘모둠 토론’ 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해, 이어진 학생 자체 평가에서 다수 학생이 뛰어남을 인정함.
			발표력	B	
			창의적 사고력	A	
			작문 능력	D	
			논리적 사고력	A	

□ 수행평가 개선 및 학생부 연동(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 도입 시기와 연동)

이외에 세특에서 학생의 역량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나이스에 입력하고 있는 수행평가 기록을 학생부에 연동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작년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숙려제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상당히 합의 수준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항목과 이에 대한 활동 기록을 세특에 연동시켜 학생의 활동과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아래 그림에서 세계사 수행평가인 ‘역사 만화책 만들기’ 과정에서 해당 학생은 ‘역사여행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랍어의 조형에 흥미를 느끼고 아랍어 알파벳’을 익히는 자기주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학생이 사학과 진학을 선택했다면 이러한 내용이 전공적합성과 연계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6] 현행 교과 학습발달사항에 수행평가 기록을 연동하는 개선 예시

<학생부 기재 개편 양식>

교과	과목	단위 수	1학기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석차 등급	비고
			수행평가 항목							
국어	국어 I	5	주장하는 글쓰기	매체비평	품사사전 제작	문학감상	61/68 (12.9)	D(240)	5	
			D	D	D	C				
...										
역사	세계사	3	세계지도 학습	근대성 탐구	역사여행 상품개발 프로젝트	역사 만화책 만들기	81/72 (7.9)	B(240)	4	
			C	C	B	A				
미술	미술	2	회화표현	일러스트	디자인 표현	미술작품 비평	90/80 (5.6)	A(240)	2	
			A	A	A	C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학기) 역사 : 아랍 지역 역사여행상품 개발 과정에서 아랍어의 조형에 흥미를 느껴 아랍어 알파벳을 익힘.

(1학기) 미술 : 사물에 대한 묘사 능력이 뛰어나고 순발력이 있어 순간적으로 사물의 특징을 포착하여 이를 표현해 내는 기능이 탁월함. 자유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특히 평소 관심이 많은 자동차 디자인 ...

물론 현재의 수행평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간에 모든 과목에 수행평가가 몰려 학생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와 수행평가 결과물이 과제로 나가서 부모 숙제가 된다는지 누가 수행평가의 결과물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학생의 부담을 현재보다 줄이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관련 도서를 읽는 것과 같은 과제는 학생에게 부여할 수 있겠지만 독서에 대한 수행평가인 독후감이나 감상문 쓰기가 과제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세특의 구조화나 수행평가를 학생부에 연동하는 개선 방안은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추진되는 2024년까지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해 병행 추진되어야 합니다.

□ 교과 수업 및 학생부 기록 개선(고교학점제 전면 도입되는 시기와 연동)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되는 2025년에 맞춰 학점제를 담을 수 있는 고교 수업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 개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교육 걱정도 향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호응되는 교과 수업 및 학생부 기록 개선 방안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보완대책은 아래의 시행 일정표에 맞춰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4] 보완 조치 시행 일정표

구분	보완 조치 내용	시행시기	비고	
제1조치	정책에 대한 (사)교육 현장 및 국민들의 신호 수신 상태 확인	2020~	통계청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교육 현장 및 국민들의 신호를 수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와 유사한 성격으로 실시하겠다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교육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함.	
제2조치	수시에서 수능 최저 폐지	2020~	당장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대입 4년예고제와 충돌할 수도 있음. 이때 제2 조치의 시기는 2024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제3조치를 적극 활용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폐지 효과를 내야 함.	
제3조치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논술폐지 및 수시 수능최저 폐지	2020	올해 3월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지표를 통해 논술폐지 수시 수능최저 폐지를 유도해야 함.	
제4조치	교과 평가 기록방식 개선	세특 구조화	2024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적용되는 시점과 연동해서 개선이 진행되어야 함.
		수행평가 개선 및 학생부 연동	2024	
		교과 수업 및 학생부 기록 개선	2025	

지금까지 제시한 보완대책은 ‘고교교육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능 사교육 시장 팽창’ 및 △‘사교육 과열지구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라는 사회적 신호를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정부가 위의 보완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위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0. 1. 9.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진(02-797-4044/내선번호 502)
정책국장 구분창(02-797-4044/내선번호 511)